

# KMI 동향분석

---

**VOL.92**  
2018 JULY

발간년월 2018년 7월(통권 제92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최재선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jschoi@kmi.re.kr](mailto:jschoi@kmi.re.kr)/051-797-4922)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여론의 관심 축이 향후 남북한 사이에 전개될 경제협력부문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경제단체를 비롯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별도 조직으로 북한 사업팀을 꾸리는 등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협력 아이템을 꺼내놓고 있다.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들어 있는 북한 철도와 도로,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개발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내놓은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이행, 그리고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이하 경제특구) 투자를 구체화하고, 가속화시키는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해 경제특구가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시금석인 동시에 외국 자본의 유치,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뤄지는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경협도 이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특구가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과 연계할 경우,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기존 남북 직항로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경제특구가 3곳이나 밀집되어 있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산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으로 꼽힌다. 특히, 북한은 원산에 수산기자재 공급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해양관광 분야는 북한의 27개 경제특구에 호텔 건설과 관광사업이 외자유치 우선순위에 들어

---

있고, 별도로 4개의 관광 개발구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협력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우리나라 환동해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유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경제 제재 해제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남북 경협 추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              |             |               |               |              |
|--------------|-------------|---------------|---------------|--------------|
| 1 은정청단 기술개발구 | 6 숙천 농업개발구  | 11 강령 국제녹색시범구 | 16 북청 농업개발구   | 21 와우도 수출가공구 |
| 2 강남 경제개발구   | 7 만포 경제개발구  | 12 현동 공업개발구   | 17 청진 경제개발구   | 22 진도 수출가공구  |
| 3 압록강 경제개발구  | 8 위원 공업개발구  | 13 해산 경제개발구   | 18 어랑 농업개발구   |              |
| 4 청수 관광개발구   | 9 신평 관광개발구  | 14 무봉 국제관광특구  | 19 온성 섬 관광개발구 |              |
| 5 청남 공업개발구   | 10 송림 수출가공구 | 15 흥남 공업개발구   | 20 경원 경제개발구   |              |

자료: KMI 작성

## 북한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개발구

### ■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협사업에 관심 증대

-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향후 전개될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각 민간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별도 조직을 꾸리거나 전문가들은 고용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여러 가지 대북 경협 아이템을 쏟아내고 있음
-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과 각종 후속 협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등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경협은 크게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행과 2) 북한 내수시장 개발과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내용이 될 것임
- 북한의 경우는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큼
- 특히, 최근 들어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이 1)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2) 경제개발 5개년 전략, 3)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1. 주요 북한 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법률

| 구분     | 법률 명칭          | 제정 연도                    |
|--------|----------------|--------------------------|
| 남북 경협  | 북남 경제협력법       | 2005. 7. 6.              |
|        | 개성 공업지구법       | 2003. 4. 24              |
|        | 금강산 관광 특구법     | 2011. 5. 31              |
| 경제 특구  |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 1993. 1. 31              |
|        |                | 2011. 12. 3<br>(최종 수정보충) |
|        |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 2011. 12. 3              |
|        |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 | 2002. 9. 12              |
| 경제 개발구 | 경제개발구법         | 2013. 5. 29              |

자료 : 국가정보원, 북한 법령집, 2017년

주 : 금강산 관광특구는 최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로 변경되었으며,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2013년 11월에 신의주 특수경제 지대로 변경된 이후 2014년 7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이 변경됨

## ■ 북한, 27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지정·개발

- 북한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 각각 지정한 5개의 국제 경제특구와<sup>1)</sup> 22개의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있음(2017년 말 기준, <표-2> 참조)
- 북한 경제특구는 1999년 라선 경제무역지대법<sup>2)</sup>, 2002년 신의주 행정구 특별법을 비롯해 모두 개별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됨
- 반면, 경제개발구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도(지역) 1구 원칙에 입각해 지정된 것이 특징임<sup>3)</sup>

### 북한 경제개발구 제정 목적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가개발 총 계획과 지역 국토건설 총 계획에 따라 국가를 개발하는데 있음

- 북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대상지역의 규모가 크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반면, 후자는 비교적 소규모이고, 지방기관이 관리한다는 점임<sup>4)</sup>
- 법에 명시된 경제개발구의 종류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 가공구, 첨단기술 개발구와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개발구 등으로 구분됨
- 또한, 북한 경제특구는 외국인 및 재외 북한동포가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경제개발구는 남측을 제외한 외국인 및 북한 기업이나 돈주들도 참여가 허용되는 특징이 있음

## ■ 남북 경험 비즈니스 모델, 북한 경제특구에

- 우리가 북한의 경제 특구와 경제개발구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북한 내수시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북한 경제개발구법은 제2조에서 경제개발구를 국가에서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 경제지대라고 규정함
- 토지 임대기간을 최고 50년까지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맺고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 저당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와 함께 투자한 기업은 과실 송금은 물론, 기업 소득세율은 결산 이윤의 14%로 하되 장려하는 부문에<sup>5)</sup> 대해서는 세율을 10%로 낮추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1) 무봉 국제관광 지대, 강령 국제 녹색경제 시범구를 포함할 경우 중앙급 경제특구(개발구)는 모두 7개소임.

2) 인구 19만 명이 거주하는 라선 경제특구의 경우, 2011년부터 라선 국제상품 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는데, 중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과 상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 이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 권역에 많이 지정된 실정임.

4)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면적은 대략 2~8평방킬로미터 안팎이며, 투자 개발 금액도 1억~2억 달러 수준임.

-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개발구는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경험을 북한 노동력과<sup>6)</sup> 결합할 경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경제개발구가 대부분 우리나라 서해안 및 동해안에서 접근이 용이한 연안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쉽고, 경제개발구가 농업, 수산업, 관광업, 수출 가공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임
-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입지지역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H자 북한 철도·물류망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북한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는 물론 관련 업체가 동반 진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표 2. 북한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현황**

| 번호 | 도명       | 시(군)                             | 개발구 명칭         | 주요 개발사업  | 비고  |
|----|----------|----------------------------------|----------------|--|-----|
| 1  | 평양시      | 은정구역<br>(위성동, 과학 1~2동, 배산동, 을밀동) | 은정 첨단<br>기술개발구 | 2014. 7  | 중앙급 |
| 2  |          |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                   | 강남 경제개발구       | 제조, 무역   | 지방급 |
| 3  | 평안<br>북도 | 신의주<br>(룡운리, 어적리)                | 압록강 경제개발구      | 현대 농업,<br>관광, 무역   | 지방급 |
| 4  |          | 삭주군(청성노동자구, 방산리)                 | 청수 관광개발구       | 2014. 7  | 지방급 |
| 5  | 평안<br>남도 | 청남구(룡북리)                         | 청남 공업개발구(추가)   | 2014. 7  | 지방급 |
| 6  |          | 숙천군(운정리)                         | 숙천 농업개발구       | 2014. 7  |     |
| 7  | 자강도      | 만포시(미타리,<br>포상리)                 | 만포 경제개발구       | 현대농업, 관광, 무역   | 지방급 |
| 8  |          | 위원군<br>(덕암리, 고성리)                | 위원 공업개발구       | 광물자원 가공, 목재가공,<br>기계설비제작업,<br>농토산물가공, 잠업 및<br>담수양어과학연구기지 | 지방급 |
| 9  | 황해<br>북도 | 신평군(평화리)                         | 신평 관광개발구       | 관광   | 지방급 |
| 10 |          | 송림시(서송리)                         | 송림 수출가공구       | 수출가공, 창고보관(유통),<br>화물운송업                                 | 지방급 |
| 11 | 황해<br>남도 | 강령군(읍)                           | 강령 국제녹색<br>시범구 | 2014. 7  | 중앙급 |
| 12 | 강원도      | 원산시(현동리)                         | 현동 공업개발구       | 정보산업, 경공업,<br>관광기념품산업                                    | 지방급 |

5) 북한 경제개발구에서 장려하는 부문은 인프라 건설, 첨단과학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임.

6) 북한 경제개발구에 입주한 기업은 북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일정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            |                             |                |   |     |
|----|------------|-----------------------------|----------------|---|-----|
| 13 | 양강도        | 혜산시(신장리)                    | 혜산 경제개발구       |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 무역                                | 지방급 |
| 14 |            | 삼지연군<br>(무봉노동자구)            | 무봉 국제관광특구      | 2015. 4. 22                                       | 중앙급 |
| 15 | 함경<br>남도   | 함흥시<br>(해안구역 덕풍동)           | 함남 공업개발구       |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br>기계설비 제작                        | 지방급 |
| 16 |            | 북청군<br>(문동리, 부동리, 종산리)      | 북청 농업개발구       | 과수, 과일가공, 축산                                      | 지방급 |
| 17 | 함경<br>북도   | 청진시<br>(송평구역 월포리, 남석리, 수성동) | 청진 경제개발구       | 금속가공, 기계제작,<br>건재생산, 전자제품,<br>경공업제품 생산 및<br>수출가공업 | 지방급 |
| 18 |            | 어랑군(룡전리)                    | 어랑 농업개발구       | 농축산, 채종·육종<br>농업과학연구개발                            | 지방급 |
| 19 |            | 온성군(읍)                      | 온성 섬 관광개발구     | 골프, 수영, 경마, 민족음식<br>등 봉사시설을 갖춘 관광                 | 지방급 |
| 20 |            | 경원군(류다섬리)                   | 경원 경제개발구       | 2015. 10. 8                                       | 지방급 |
| 21 | 남포시        | 와우도 구역(령남리)                 | 와우도 수출가공구      | 수출지향 가공조립업(임가공)                                   | 지방급 |
| 22 |            | 와우도 구역<br>(진도동, 화도리)        | 진도 수출가공구       | 2014. 7   | 지방급 |
| 1  | 경 제<br>특 구 |                             | 개성 공업지구        |   | 중앙급 |
| 2  |            |                             |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   | 중앙급 |
| 3  |            |                             |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   | 중앙급 |
| 4  |            |                             | 라선 경제무역지대      |   | 중앙급 |
| 5  |            |                             | 신의주 국제 경제지대    |   | 중앙급 |

자료 : 한국산업은행 KDB 미래전략연구소,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제공자료 일부 수정

주 : 주요 개발사업 란에서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2013년 5월에 지정된 경제개발구이며, 평양직할시 강남 경제 개발구는 2017년 12월 21일에 지정되었으며, 이곳은 주로 평양 주민을 위한 채소단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3.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 구분                   |             | 주요내용  |
|----------------------|-------------|---|
| 설립 목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li> <li>- 국가 개발 총 계획과 지역 국토건설 총 계획에 따라 국가를 개발</li> </ul>  |
| 지역선정 원칙              |             | ①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부합 ②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 ③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br>④ 주민지역과 일정거리 확보 ⑤ 국가지정 보호구역 훼손 금지   |
| 개발 원칙                |             | ① 단계적 개발 ② 외자유치 다원화 ③ 자연생태환경 보호 ④ 토지와 자원 합리적 이용<br>⑤ 생산, 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 ⑥ 경영활동 편의보장 및 사회공공이익 보장<br>⑦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
| 관리 권한 및 개발구 유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특수경제 지도기관 및 지방(道) 인민위원회</li> <li>- 분야별로 공업 개발구, 농업 개발구, 관광 개발구, 수출 가공구, 첨단기술 개발구 관리 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li> </ul>                |
| 투자 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개인·경제조직, 해외 동포</li> </ul>   |
| 기업<br>관련<br>활동<br>혜택 | 기업경영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li> <li>- 경영활동에서 특혜 보장</li> <li>- 회사, 지사, 사무소 자유롭게 설립 가능</li> </ul>  |
|                      | 기업 활동 우대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 노동력채용, 세금납부 등 특혜보장(라선과 동일)</li> <li>- 인프라 건설, 첨단기술, 국제경쟁력 갖춘 생산 부문 투자 장려 및 우대·토지위치 선택 우선권 부여, 토지사용료 일정기간 면제</li> </ul>                     |
|                      | 세금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소득세를 결산이윤의 14%, 장려부문 결산이윤의 10%</li> <li>- 10년 이상 운영기업은 기업소득세 감면 혹은 면제</li> <li>- 기업에 재투자 혹은 기업을 신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 투자분의 소득세 전부 환급</li> </ul> |
|                      | 관세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관세 혜택: ①건설용 물자 ②가공중계보상무역 물자 ③생산 또는 경영용 물자, 수출물자, 투자가 생활용품</li> </ul>  |
|                      | 토지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은 50년(라선과 동일)</li> <li>-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 매매, 재 임대, 증여, 상속, 저당 가능</li> </ul>   |
|                      |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노동력, 외국인 노동력</li> </ul>   |
|                      | 기타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법적인 이윤과 기타 소득의 자유로운 송금(라선과 동일)</li> <li>-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 가능</li> <li>- 유가증권 거래 가능</li> </ul>  |

자료 : 한국산업은행 KDB 미래전략연구소,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제공자료

## 북한이 원하는 경제특구 개발방향

### ■ 중국의 협력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관심

- 북한은 2017년 12월 말 현재, 모두 27곳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투자 동향 등을 볼 때, 향후 개발 방식과 개발 방향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 경제특구 3곳에 대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sup>7)</sup> 10곳 이상이 북중 접경 지대에 있어 입지여건상 북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 중국은 현재 북한 경제개발 사업에 5,000억 달러를 차관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이와 관련 북한과 중국은 제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사업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홍콩 자본 유치 : 또한 북한은 2012년 홍콩 투자기업 다중화 국제그룹과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발계약을 체결했으며, 무봉 국제관광지대도 홍콩기업이 개발에 참여 예정임<sup>8)</sup>
- 거점 도시 육성 : 특히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게 평양, 신의주, 해주, 원산 등 4개 도시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sup>9)</sup>
-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북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 경제특구의 상당 부문은 북중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 인프라 건설, 국제 경쟁력 있는 협력 아이템 중심

- 북한은 2013년에 경제개발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경제특구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외자 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실제로 북한은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내 나라 등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매체에 투자를 권유하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의 투자 유치 설명회 등도 주로 중국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자체 예산으로 경제특구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경제특구 개발 법규에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 북한 내수시장에 상품판매를 허용하면서도 국제 경쟁력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 호텔 건설과 관광사업, 수산 양식도 관심도 높아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는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인 동시에 모든 경제특구의 단위사업 아이템으로 들어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사업임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제개발구 22개 가운데, 관광 개발구(무봉, 청수, 신평, 온성 섬 관광개발구)가 4곳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실정임

8) 이와 별도로 2015년 10월, 북한의 대외무역성과 중국 랴오닝 성 정부는 이 지역을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홍콩 다중화 그룹과 맺은 신의주 공동개발 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보임

9)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개성시를 경제특구 시범지구로 선정해 경제발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dailynk.com, 2018.07.03. 검색)



- 북한이 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시설 투자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한편, 북한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함께, 양식장 개발 등 물고기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특구의 특성 고려한 해양수산 협력

### ■ 해운 항만 : 신의주 등 경제특구 밀집 지역 투자

-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과 연계할 경우,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업체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남북한 선박 운항과 항만 인프라 개발, 물류단지 투자 등은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인근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sup>10)</sup>
- 북한 신의주 지역은 기존 남북한 직항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북한 경제특구 3곳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자강도 지역의 경제특구 물량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특히, 북한은 이곳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해운·항만 부문의 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관심을 뒤야 하는 경제특구 지역은 평양 직할시를 배후 권역으로 두고 있는 남포항인데, 이곳에는 수출입 물량이 많은 수출 가공구 등이 4곳 지정된 곳임
- 한편, 북한의 연안해운 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공동 투자형태로 선사를 설립해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북한 연안항로 운항사업(연안 Cabotage)도 가능한 협력 사업임
- 북한 연안 운송권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 항만에서 우리나라 선사가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제3국 운송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0)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대부분은 북한 연안이나 연안 인근 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표 4. 해운·물류분야 북한 경제특구 남북 협력방향(안)

| 구분     | 협력 사업                             | 비고                           |
|--------|-----------------------------------|------------------------------|
| 해운 분야  | 남북한 직항로 재개 및 기항지 확대               | 남북해운회담 추진                    |
|        | 남북 연안 공동선사 설립 및 운항                |                              |
|        | 북한 항만-제3국 항만 운항권 확보               |                              |
| 항만 분야  | 북한 항만조사 및 인프라 건설<br>항만 배후 물류단지 개발 | 해양수산부 및 연구기관,<br>항만 엔지니어링 업체 |
| 선원 분야  | 북한 해운 및 물류인력 양성 및 활용              | 정부 및 관련업체                    |
| 크루즈 사업 | 남북한 연안 크루즈, 남·북·일·러 크루즈           | 정부 및 관광업계 추진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수산 양식 : 어선 건조와 양식장 개발, 수산기자재 생산

- 북한에서 수산업은 신년사에 해마다 언급될 정도로 매우 관심 높은 분야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주 지방의 수산기업소를 방문하여, 물고기 생산을 독려하고 있음<sup>11)</sup>
-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기업소 현지지도 등을 통해 수산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식량으로서의 중요성과 단백질 공급원, 그리고 외화 획득수단이라는 점 때문임<sup>12)</sup>
- 북한에서 최근 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문은 1)어선 건조와 어선 수리 능력제고, 2)과학적인 어로 활동, 3)양식어업의 활성화 등에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동해안에 종합 어구생산기지를 건설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북청 농업 개발구 등에 동해안 수산물 가공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음
-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북 수산분야 협력은 북한어선 건조사업과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건설, 종묘 배양장 설치, 우리나라 어선의 북한 서해안 및 동해안 입어사업이 핵심이 될 것임
- 한편, KMI가 지난 5월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양 및 연근해 어선에 산업연수생 형태로 북한 어선원을 승선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하는 요청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산 관련 대학이나 연수원 등 교육 훈련 기관이 북한 경제특구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어선원 인력 양성 기관을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있음

1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12월 평양에서 수산부문 열성자 대회를 개최, 어업 생산성 증대를 강조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5월 9일 메기 공장 등 주로 메기 공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현지 지도를 했음

12)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 등을 통해 "총알 한 발보다 물고기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수산 능력 배양, 수산 양식 기술 개발, 연어 양식사업 등에 적극 관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5. 북한 신년사의 수산 관련 내용

| 2014년                     | 2017년  | 2018년           |
|---------------------------|--|-----------------|
| 고기 배와 어구 현대화              | 적극적인 어로 전투   | 배 제작과 배 수리 능력제고 |
|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잡이<br>전투 전개 | 양어와 양식의 확대   | 과학적인 어로 전투 전개   |
| 바닷가 양식 대대적 육성             | 현대적인 고기 배 생산<br>동해안에 종합 어구 생산기지 구축<br>수산업의 물질적·기술적 토대 강화 | 양어와 양식의 활성화     |

자료 :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KMI 정리

## ■ 해양 관광 : 북한 관광산업은 외국인 투자 우선 업종

- 북한과의 남북 경험 최우선 순위 아이템을 꼽는다면, 해양관광을 포함한 관광분야가 가장 유망하고, 현실적으로 큰 자본 투자 없이 단시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됨
- 실제로 북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중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북·중·러 접경지역인 온성 섬 관광 개발구 등 5개의 관광 관련 특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7개 모든 경제 특구에 관광사업 투자와 호텔 건설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가 북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나설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사업 중 원산 갈마 해양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라선 경제 특구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해 요트 부두 개발, 비파도 해양레저 단지 개발 참여 및 이 사업을 온성 섬 관광사업과 북·중·러 접경지대 연계 관광사업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협력 사업임
-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신 북방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한과 북한을 연결 하는 크루즈 사업과 한·일·북·러 4개국 기항 크루즈 운항사업도 제안하고 있음

## 넘어야 하는 장애물과 해결 과제

###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는?

- 앞으로 전개될 북한 경제 개발사업의 최대 변수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 조치를 어떻게 거둬들이느냐에 달려 있음
- 그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기 이전부터 적성국이나 테러 지원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음

- 그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제재조치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바 있음
- 유엔의 대북 결의는 북한 선박 입항금지는 물론, 유류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 조치, 어획권 구입 금지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법 등 모두 15개 법률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교역과 대북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와 같은 두 나라 사이의 수준 높은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임

표 6.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주요 결의안(2016년 이후)

| 결의안 번호 | 주요내용  | 채택일      |
|--------|---|----------|
| 제2270호 | 대량살상무기 관련 철, 무연탄 등 수입금지 <sup>13)</sup>                          | 2016. 3  |
| 제2321호 | 북한 무연탄 수입 쿼터제 도입, 북한선박 입항금지 등                                   | 2016. 11 |
| 제2356호 | 북한 주요기관 4곳 및 14명 기존의 제재 대상에 추가                                  | 2017. 6  |
| 제2371호 |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 북한합작사업<br>신설 및 확대 금지                      | 2017. 8  |
| 제2375호 |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 수입금지, 대북 유류수출 제한, 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합작 사업<br>120내 폐쇄 | 2017. 9  |
| 제2397호 | 유류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품목 대폭 확대<br>북한 노동자 12개월 내 본국 송환조치, 어획권 구입 금지     | 2017. 12 |

자료 : 매일경제, 2018년 6월 12일자 내용 정리

## ■ 우리나라,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가 가능한가?

-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경협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북한 경제특구법이나<sup>14)</sup> 경제개발구법에서 외국인과 북한주민의 해당 지역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다만, 2005년에 제정된 북남 경제협력법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발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각의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다만, 금강산관광특구와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자본의 투자가 가능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같은 법 제3조)

- 구체적으로는 향후 남북 협상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우리나라가 경제특구 등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5조의 개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sup>15)</sup>
- 또 하나 눈여겨 볼 사항은 북한과 중국이 2010년 12월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 관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임<sup>16)</sup>
- 지난 5월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중국에게 북한의 4대 거점지역(평양, 청진, 남포, 신의주)에 대한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sup>17)</sup>
- 이 같은 점에 미루어 볼 때,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자본의 북한 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도 한층 가속화 될 것임

## ■ 그 많은 투자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업단위에 따라 다양한 금융 조달방안이 검토되고 있음<sup>18)</sup>
- 첫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조성되는 남북 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국제통화기금<sup>19)</sup>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도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을 한반도 권역까지 확대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자금도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넷째, 일본은 북한 개발이 본격화 되는 경우,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전후 배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지금까지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자본 등에 북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sup>20)</sup>

15) 경제개발구법 제5조(투자자에 대한 특례)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6) 한명섭, "남한 자본 차별하는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유의해야", 남북물류포럼 칼럼, 제416호

17) 중앙일보, 2018년 6월 6일자, 1면

18) 북한은 내나라, 오늘의 조선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 TV 등을 통해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고 있음

19)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양곤 도시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20) 지난 6월 26일 대한 상의에서 열린 북한 경험 컨퍼런스에서 북한 대학원 대학의 양문수 교수는 앞으로 남북 경험사업에서 개성공단과 같이 우리나라가 독점적인 지위는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음

## KMI 동향분석

| 구분   | 제목   | 발간일        |
|------|--|------------|
| 제1호  |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들 듯  | 2016.11.02 |
| 제2호  |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 2016.11.09 |
| 제3호  |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 2016.11.16 |
| 제4호  |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 2016.11.23 |
| 제5호  |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 2016.12.01 |
| 제6호  |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 2016.12.08 |
| 제7호  |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 2016.12.15 |
| 제8호  |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 2016.12.26 |
| 제9호  |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 2017.01.04 |
| 제10호 |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 2017.01.11 |
| 제11호 |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 2017.01.19 |
| 제12호 |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 2017.01.26 |
| 제13호 |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 2017.02.01 |
| 제14호 |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 2017.02.08 |
| 제15호 |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 2017.02.15 |
| 제16호 |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 2017.02.22 |
| 제17호 |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br>-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 2017.02.23 |
| 제18호 |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br>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2017.03.02 |
| 제19호 |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 2017.03.15 |
| 제20호 |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 2017.03.24 |
| 제21호 |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 2017.03.31 |
| 제22호 |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 2017.04.07 |
| 제23호 |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br>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 2017.04.14 |
| 제24호 |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 2017.04.19 |
| 제25호 |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 2017.04.21 |
| 제26호 |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 2017.04.28 |
| 제27호 |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 2017.05.04 |
| 제28호 |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 2017.05.18 |
| 제29호 |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 2017.05.25 |
| 제30호 |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 2017.06.01 |
| 제31호 |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br>-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 2017.06.07 |
| 제32호 |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2017.06.14 |
| 제33호 |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 2017.06.21 |
| 제34호 |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 2017.06.28 |



| 구분   | 제목   | 발간일        |
|------|--|------------|
| 제35호 |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 2017.07.05 |
| 제36호 |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 2017.07.12 |
| 제37호 |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 2017.07.19 |
| 제38호 |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 2017.07.26 |
| 제39호 |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 2017.07.26 |
| 제40호 |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 2017.08.02 |
| 제41호 |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 2017.08.09 |
| 제42호 |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 2017.08.16 |
| 제43호 |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 2017.08.23 |
| 제44호 |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 2017.08.31 |
| 제45호 |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 2017.09.12 |
| 제46호 |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br>-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 2017.09.13 |
| 제47호 |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 2017.09.20 |
| 제48호 |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 2017.09.20 |
| 제49호 |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 2017.09.29 |
| 제50호 |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 2017.09.29 |
| 제51호 |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 2017.10.12 |
| 제52호 |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 2017.10.23 |
| 제53호 |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 2017.10.27 |
| 제54호 |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 2017.10.27 |
| 제55호 |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 2017.11.01 |
| 제56호 |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br>‘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 2017.11.10 |
| 제57호 |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br>-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 2017.11.15 |
| 제58호 |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 2017.11.22 |
| 제59호 |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 2017.11.24 |
| 제60호 |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 2017.11.29 |
| 제61호 |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 2017.12.06 |
| 제62호 |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br>‘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 2017.12.13 |
| 제63호 |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 2017.12.20 |
| 제64호 | 부산항, 2,000만 TEU 달성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017.12.27 |
| 제65호 |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 2018.01.03 |
| 제66호 |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 2018.01.10 |

| 구분   | 제목   | 발간일         |
|------|--|-------------|
| 제67호 |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 2018.01.17  |
| 제68호 |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br>- 범부처 R&D 추진필요 -                  | 2018.01.24  |
| 제69호 |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 2018.01.31. |
| 제70호 |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br>추진 필요                                | 2018.02.07. |
| 제71호 |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br>-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 2018.02.07. |
| 제72호 |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 2018.02.14. |
| 제73호 |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 2018.02.21. |
| 제74호 |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 2018.02.28. |
| 제75호 |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 2018.03.09. |
| 제76호 |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 2018.03.14. |
| 제77호 |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2018.03.21. |
| 제78호 |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 2018.03.30. |
| 제79호 |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br>-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 2018.04.13. |
| 제80호 |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br>'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 2018.04.20. |
| 제81호 |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 2018.04.30. |
| 제82호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br>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 2018.05.10. |
| 제83호 |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 2018.05.16. |
| 제84호 |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br>-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 2018.05.24. |
| 제85호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 2018.05.31. |
| 제86호 |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 2018.06.11. |
| 제87호 |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 2018.06.14. |
| 제88호 |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 2018.06.20. |
| 제89호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 2018.06.27. |
| 제90호 |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2018.07.04. |
| 제91호 |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 2018.07.11. |

URL: <http://www.kmi.re.kr/>